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론탄압

- 정부권력을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

발표자 :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천영식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론탄압

3無 탄압 - 무식, 무능, 무대뽀

소송과 악법을 동원

중앙일보 남정호 사건

중앙일보

2019년 06월 11일
30면 (오피니언)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남정호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노르웨이 서해안엔 베르겐이란 그림 같은 도시가 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새파란 바닷물이 넘실대는, 세계 최고의 절경이라는 송네 피오르의 심장부다. 누구든 이곳에 오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가 모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갈 곳이다. 명목은 노르웨이 발주로 대우조선이 건조한 2만 6000톤급 군수지원함 '모우호' 승선. 이 나라 최대 군함이지만 조선 강국 한국으로선 그리 특별하진 않다. 대우조선은 이미 3만7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만들어 영국에 수출한 적이 있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 부부는 배에 올라 피오르의 비경을 접할 거다. 이후 이들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개운치가 않았다.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의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며 “2002년 이희호 여사가 혼자 방미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로 넉달 전 문 대통령과 인도에 간 적이 있다. 남편이 일하는 사이, 인도 정부는 그를 세계적 유적인 후마운 묘지로 안내했다. 당시 김 여사는 “시간이 없어 타지마할의 전신인 이곳에 왔다”며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초청 과정도 그렇지만 일정도 별났다. 청와대가 언급했던 이희호 여사 사례와 비교해 보자.

2002년 4월 이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단 대표로 방미했다. 전용

법원의 1심 판결

중앙일보

2020년 07월 20일
12면 (사회)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정정보도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남정호 칼럼 관련
청와대, 정정보도 소송 패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판 취지 칼럼을 게재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병철)는 지난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6월 11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취임 이후 19번의 문 대통령 출국 중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번을 동행했고, 인도의 경우 김 여사 혼자 방문했다고 적었다. 이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 타지마할, 체코 프라하, 바티칸 성베드로성당 등 방문지를 소개하면서 “부부동반 세계 일주하

나”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나” 등 야당의 비판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다. 언중위는 직권으로 반론 보도 결정을 했지만, 중앙일보가 이의를 신청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먼저 문 대통령 부부를 대

상으로 한 보도인 만큼, 비서실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 보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조직이나 개인까지 피해자로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비판적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여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 내용 자체도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이 갖고 관광지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유람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므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8.2×7.1)cm

▲ 중앙일보 20일자 12면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정정보도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남정호 사건

남정호 논설위원

◇알려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특징

1. 청구와 대가 소송주체
 - 2.소송만능주의
 - 3.언론위축효과
-

김정식 사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
되셨습니까?

탈원전	공수처	인도양비경제	국민연금장악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
국가에너지 거반과파	수사권력 장악	외교부 장악	기획경제부 장악	반미선동	동원선언 광산적화합 연방안보

FINGERSNAP

1000만명 대학살 · 1000만명 보트피플 동해바다 익사
500만명 중국에 팔리가 성해해 · 2500만명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한 노매생활

박원순 부친인 박길보는 위안부 관리와 윤반 등을 담당하던/보국대 출신이었다? 유시민 부친인 유태우는 일제 강점기 훈도, 그것도 역사를 가르치는 훈도였다?

**2020
응답하라
친일파후손**

홍영표·조부인, 홍종철은 조선총독부·중추원 참의로 친일인명사전 704인 명단에 올라있다? 정동영 부친인 정진철은 금융조합의 서기를 하며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소작농민을 괴롭혔다?

**그래,
내년 총선
한일전
가즈아!!!**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은 일제 강점기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 후 홍남시청 농업계장, 과장을 지냈다. **친일파**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2020.8.27. 문재인,교회지도자 간담회)

한국방송공사 '시사기획 창' 사건



조국의 소송 남발

재판 앞둔 조국... '회고록소송·SNS' 반격 강도 높인다

뉴스시스 입력 2021-06-07 11:35 수정 2021-06-07 11:35

조국, 회고록 통해 檢 수사 조목 비판
언론보도에는 손해소송 청구로 대응
SNS 활동도 계속하며 적극 의견피력
이번주 '입시비리·감찰무마' 재판재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언론보도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논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반년만에 재판도 재개된다.

왜 이리 소송을 좋아할까

소송 집착은 역대 대통령에게 없던 일
입법 사법 장악의 자신감?

악법을 좋아하는 이유?

악법은 소송의 구조화

“박근혜정부때 법은 목욕탕이라고 비유, 문재인정부때 법은 탄압의 수단”

포털 장악 법안



안철수 

2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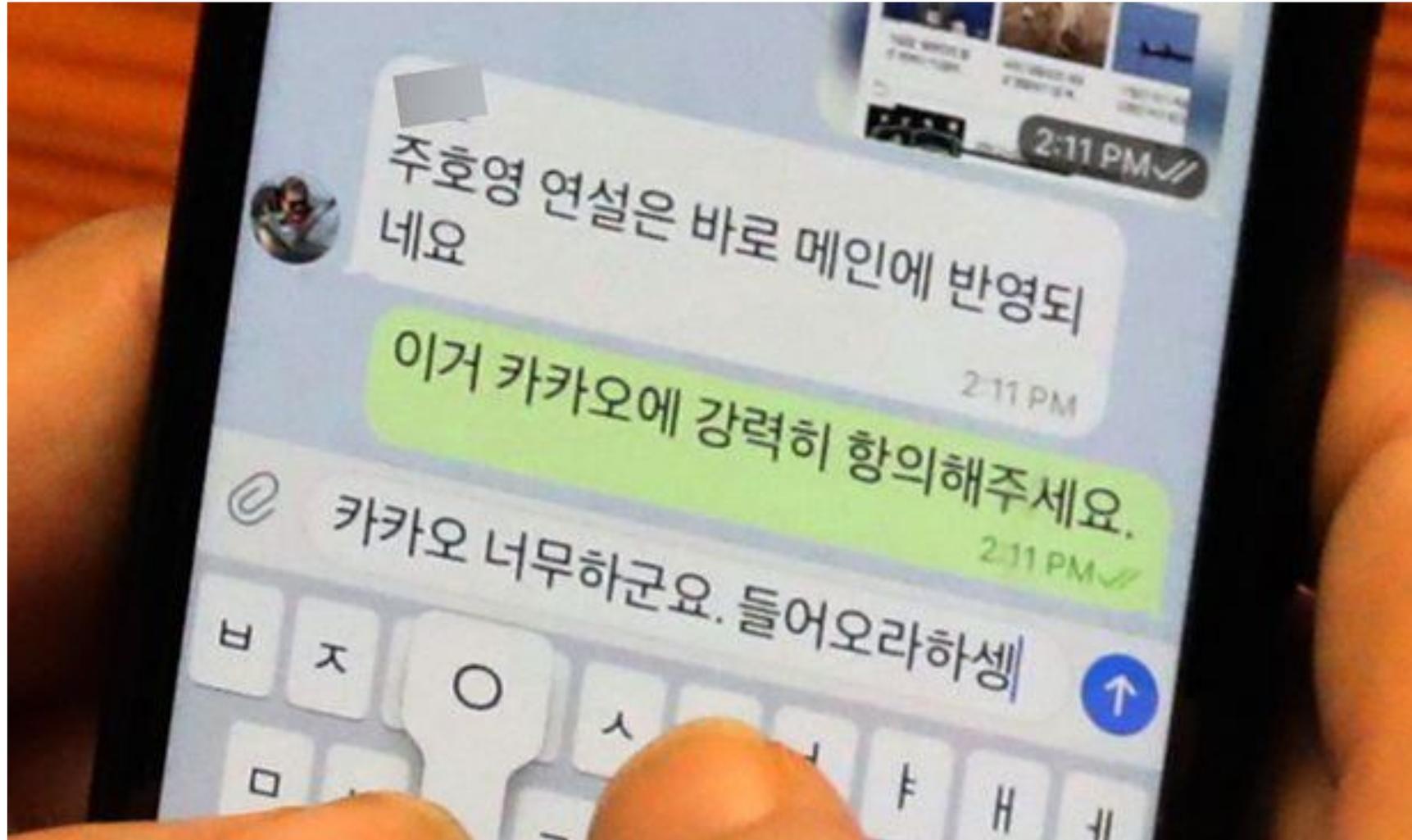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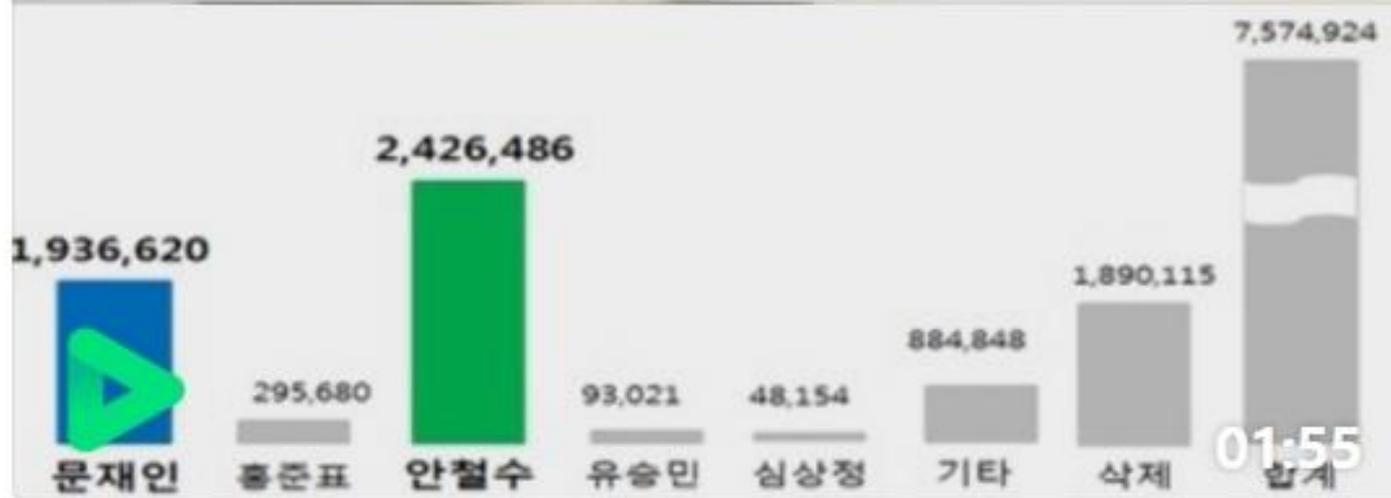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포털 장악 법안



드루킹 사건의 교훈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2심유죄 최대 피해자 안철수?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2심유죄 최대 피해자 안철수?

투데이이슈 | 네이버TV

▶ 51 | 2020.11.07.

정부광고법

 방송,연예 기타 여러이야기 | 2021.02.15.

'정부광고 대행 언론진흥재단 독점해제법' 발의

변재일 의원,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 대표발의
정부광고 공동 대행을 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신설 및 지역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광고 #대행 #언론진흥재단 #독점해제법 #발의

 www.mediatoday.co.kr > news

'정부광고법' 시행 1년, 언론환경 나아졌나 -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불과 1년 전 정부가 세금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집행할 근거법률이 없었다. 지난해 12월13일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정부기관의 광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광고법 시행 약 1년이 지났지만 언론환경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부광고법에 ...

 www.the-pr.co.kr > news

[정부광고법 2년 진단 ①] '언론지원법' 돼버렸다 - The PR

[더피알=안선혜 기자]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공공기관 광고업무대행을 일임받게 된 데다, 그 대가로 받는 10%의 수수료가 ...
2020.12.17.

 www.mediaus.co.kr > news

선의의 미디어바우처법이 정부광고를 만났을 때 - 미디어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취지는 좋으나 정부광고 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바우처법이 '언론 생태계 복원'이라는 선한 의도로 탄생한 법안이지만, '정부광고'가 재원이 ...
2021.06.01.

교훈

1. 전방위적 언론탄압의 일상화
2. 국회 모니터의 필요성

우파의 언론정책

이명박-종편 설립

박근혜-한류거점,문화콘텐츠기지화

좌파의 언론정책

노무현-기자실폐쇄,기득권축소

문재인-소송과 악법



“전체주의는 비판을 용납 못한다”

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비판 잘하면서 남이 비판하면 '발끈'"

입력 2020.08.23 16:49 | 수정 2020.08.23 20:45

"비판 의견 개선하면 법정다툼...다른 의견 용납 못해"

"진보 세력, 정권 잡아도 '약자' 프레임 유지"

"비판 일면 곧바로 '내가 피해자' 심리 발동"



사진 청와대 제공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데엔 익숙하지만, 남의 비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